



9월 24일, 10만 명이 참여한 독일 기후 행동

# 기후 위기 세계 지도자들은 해결 못한다 대안은 다른 데 있다

관련 기사 3, 4~5면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2면

기후 위기와 불평등 —  
정의로운 해결책은  
무엇인가?

3면

기후변화,  
세계 정상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4~5면

그리스 사회주의자 초청 강연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좌파의  
최근 경험

6~7면

정부의 '사공일기'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9면

낙태권 공격에  
맞선 미국 시위

10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현대중공업 산업 재해

11, 12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김승주

주류 양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핵무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9월 2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북핵에 맞서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인데,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전투기에 미국 핵무기를 탑재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려는 구상이다.(물론 핵무기 통제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홍준표는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그리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석열도 별반 다르지 않다.

9월 22일 발표된 윤석열의 안보 공약에도 “한미 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의 추진”이 담겨 있다. 그리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으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홍준표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인 유승민, 안상수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전술핵은 냉전기에 남한에 1000기 가까이 배치됐다가 1991년에 전량 철수됐다. 이를 다시 되돌리자는 것이다.



평화에 관심 없고 부패한 자들로 가득한 국민의힘 소속 대선 예비 후보들

### 위험천만한 단꿈

핵무장은 우파를 비롯해 남한 지배계급의 오랜 바람이다. 그러나 독자적 핵무장은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남한이 자신의 핵우산 아래에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남한의 핵무장 시도가 일본의 핵무장 야욕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다.

남한 지배계급과 우파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불만이 있지만 독자적 핵무장이 안 된다면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사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대북 억지

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유사시에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군사 작전을 함께 연습해 왔다.

핵전력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 해 온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들의 공통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연구에 관한 부분적인 자율성을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고 핵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

군은 아직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국가 중에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SLBM은 핵탄두를 장착해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궁극의 전략 무기다.

한반도와 그 일대에서 핵무기 경쟁이 점증한 결과는 실로 위험천만할 수 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제국주의적 갈등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여 있다.

70년 전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을 겪었다. 미

국은 이때도 중국의 전쟁 개입에 대응하려고 한반도에 핵폭탄 수십 개를 떨어트리기 직전까지 갔었다.

핵무기 경쟁 같은 미친 짓이 한반도에서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바로 그런 위험천만한 단꿈을 꾸고 있다.

### 대장동 의혹

한편,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도 쟁점이 됐다. 1위 대선 주자인 윤석열의 아버지가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 누나와 가까운 사이라는 의심 어린 눈초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이재명을 겨냥했던 의혹이 뜻밖에 광상도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부패 문제로 불거지자 당혹해 하고 있다.

부패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은 자들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낳은 실망과 환멸 덕분에 기회를 얻었고, 중도확장을 위해 윤석열을 영입했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은 예상보다 빨리 바람이 빠졌고, 강경 우파 홍준표가 돌아와 떠오르고 있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의힘은 새 물이나 고인 물이나 위험하고 썩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 전기 요금, 우웃값 인상

#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강동훈

10월 1일부터 전기 요금과 우웃값이 인상된 데 이어, 연말에는 가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집값 상승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전기 요금은 10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됐는데,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월 1050원 오를 예정이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서울우유 1리터 가격이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오르는 등 우웃값도 4~6퍼센트 정도 올랐다.

전기 요금과 우웃값이 오른 것은 국제 석유 가격 급등 때문이다.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가 해제되고 석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오펙(OPEC, 석유수출국기구) 등 석유 생산 국가들은 그동안 석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석유 생산량을 조금만 늘리고 있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이 올해에

20퍼센트 넘게 올랐을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석유 가격 인상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들도 가격이 대폭 상승했고, 곡물·사료 가격도 올라 우유 생산비도 늘어났다.

도시가스, 지하철· 시내버스·철도·택시 등 대중교통, 상하수도, 종량제 봉투 요금 등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코레일은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 1조 3427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1조 원대 적자가 날 상황이어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할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내년 대선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로 전기 요금이 오른 데 이어,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검토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기후환경요금을 올려 또 다시 전기 요금을 인상하려고 한다.

### 연료비 연동제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전기 요금 인상을 막아 왔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한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이미 올해 2~3분기부터 전기 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서민 부담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도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공 서비스 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들은 정부가 지원해 적자를 메꾸고 노동자·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마땅하다.

우파들은 전기 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핵발전 용량과 핵발전량 모두 꾸준히 증가해 왔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폐쇄됐지만, 그보다 용량이 큰 신고리 3, 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중 하나가 바로 탈원전 포기이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청구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문제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할지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 기업 경쟁력을 위해 화석연료를 태워 값싸게 전기를 생산해 온 정부와, 그 전기를 막대하게 소비해 이득을 챙겨 온 거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대는 게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정의당이 빈곤층에 대한 전기 요금 지원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연료비 연동제나 기후환경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기후 위기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에 맞서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우유와 같은 생필품 가격 인상도 방지하고 있다. 낙농가들이 사료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우유 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정부는 낙농가들더러 손해를 감수하라고 협박만 할 뿐이었다.

결국 낙농가들이 공급하는 우유 가격을 리터당 21원 올리자(926원에서 947원으로), 유업체들은 우유 소매 가격을 200원 가까이 올리고 있다.

우유 같은 생필품은 가격을 낮추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원을 할 의지가 없다. 이미 해외의 저렴한 우유가 대거 수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에 따라 2026년부터 우유·치즈 관세가 사라져 더 저렴하게 유제품이 수입될 기다릴 뿐이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서민은 치솟는 우유 가격으로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값싼 해외 우유와 경쟁해야 하는 낙농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필수 공공 서비스와 생필품 가격을 시장의 변동에 내맡기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다.

정부가 ‘착한 적자’를 감수하며 더 많은 투자와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 기후 위기와 불평등 — 정의로운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선영

기후 위기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G20 국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퍼센트를 배출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의 75퍼센트는 가난한 나라에서 생긴다.

지난해에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발표한 ‘2000~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를 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지난 20년간 자연 재해는 그전 20년보다 70퍼센트가 늘었고, 해마다 6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재해 사망자 수는 저소득 국가가 선진국의 4곱절에 이른다. 기후 위기가 더욱 심한 적도 부근에 가난한 나라가 많을 뿐 아니라 홍수, 태풍, 가뭄 등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9년에 기후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 중 5곳이 아프리카에 있었다. 예컨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막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8년간 나이지리아의 원시림은 14퍼센트 이상 사라졌고, 전체 국토의 35퍼센트 이상이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농부의 95퍼센트 이상이 관개 시설 없이 농사를 짓는 상황이라 사막화는 심각한 식량 위기와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해의 자원을 유지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벌이는 빈국의 권력자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물 부족 때문에 국가 간, 부족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30만 명이 죽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던 수단 다르푸르 학살에도 물 부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기후 위기는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재난, 빈곤,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돼 세계를 떠돌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요새처럼 장벽을 치고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한국도 가장 난민 수용에 가장 인색한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탄소 배출을 많이 해 온 선진국들이 기후 위기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산업화 이후인 1771~2017년 동안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을 따져 보면, 미국이 전체의 25퍼센트, 유럽연합 28개국이 22퍼센트, 중국이 12.7퍼센트를 차지한다. 여전히 서방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 큰 것이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1퍼센트로 세계 16위이지만, 현재 배출량은 세계 8~9위다. 특히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12.54톤)은 세계 4위로, 세계 평균(4.79톤)의 2.5배이고 중



(나미비아)가나리아에 있는 사막 지대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기후 재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9년 동아프리카를 휩쓴 태풍 이다일로 인해 260만여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국(6.92톤)보다 훨씬 많다.

세계자원연구소는 각국 정부가 내놓는 계획대로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면, 2030년에 1인당 배출량 1위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본주의 체제와 그 수혜자들의 책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선진국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1990~2015년 세계 1퍼센트 부유층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가난한 50퍼센트가 배출한 양의 두 배가 넘는다(옥스팜). 같은 기간 부유한 1퍼센트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가난한 50퍼센트의 세 배에 달했다.

한국에서도 삼성 총수 일가가 매달 2500만 원어치 전기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집안에 적정 온도와 습도, 공기의 질을 유지하려고 많은 전기를 쓴다고 한다. 이들에게 열대야, 찜뽕 더위, 폭한은 남의 나라 일인 것이다.

무엇보다 탄소 배출은 대부분 기업 책임이다.

지난 30년간 거대 기업 100곳이 온실가스 배출량 71퍼센트에 해당하는 연료를 공급해 막대한 이윤을 거뒀다(탄소공개프로젝트(CDP)와 기후책임성연구소(CAI) 공동 연구). 1854~2015년 동안에도 사라진 기업까지 포함해 불과 224개 기업이 화석 연료 72퍼센트를 공급했다.

한국에서도 탄소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는 혼자서만 전체의 10퍼센트 이상을 배출한다. 한국에서 전력 소비는 가정용은 13.5퍼센트인 반면 산업용은 53.8퍼센트에 달한다.

따라서 기후 위기의 책임이 전체 인류에게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탄소 배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은 기업주들과 부자들, 각국 지배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들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며 무한 경쟁을 벌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고, 그 수혜를 누려 왔다.

반면 각국의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고통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미국과 캐나다 북서부의 폭염, 갈수록 심해지는 캘리포니아의 산불, 텍사스의 폭한, 유럽의 홍수 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도 2018년 폭염의 영향으로 무려 7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행정안전부). 앞으로 폭염은 더 늘어날 텐데, 피약벌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서울대 청소노동자처럼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쉬어야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약자들에게 그 고통이 집중될 것이다.

### 시장도, 유엔도 기후 불평등 해결 못해

각국 지배자들은 기후 위기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예컨대,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을 이용한 방식은 기업의 이윤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며 탄소 배출은 제대로 감소시키지 못해 왔다. 또, 보편 증세 방식으로 도입되는 탄소세는 그 역진적 성격 때문에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반발을 사 왔다. 2018~2019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란 조끼 시위처럼 말이다.

영국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탄광이 폐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겪어지기도 했다.

선진국 정부들이 화석 연료의 대안

으로 육성한 바이오연료 사업은 세계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곡물 가격을 인상시키며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렸다. 또, 제3세계에 숲을 조성해 탄소 배출을 상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계획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장 원리에 기댄 대안은 기업 이윤을 위한 꼼수와 사기 등으로 점철되며 문제를 악화시켜 왔다.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도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무능했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15차 유엔기후정상회의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을 가난한 나라들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급된 돈은 200억 달러에 불과하다.

2015년의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의 책임을 줄이려는 선진국의 입김이 반영됐고, 결국 가난한 나라들은 기후 위기의 책임을 물어 부유한 국가들을 고소할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공간이다.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이윤과 국가경쟁력을 우선하며 암투를 벌인다. 이 때문에 기후 위기 대처는 언제나 후순위이고,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러 왔다. 지난 수십 년간 유엔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은 완전히 실패했다.

### 진정한 대안

기후 불평등 심화는 기후 위기를 둘러싼 진정한 분단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 진정한 분단선은 채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 또, 선진국의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분단선은 계급 사이에 놓여 있다. 화석연료 체제에 기반해 이윤을 뽑아내는 자본가와 각국의 지배계급은 이 체제를 수호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반면,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기후 위기에 맞서 지속 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이해관계는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 이들이 이윤을 위한 생산 체제인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진정으로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건설할 때에야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사회를 건설하려면 노동계급의 힘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 이윤 체제를 마비시킬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2019년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벌어졌을 때 전력노조의 조합원들은 전력 시설을 점거하고 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가정에 전기를 공급했다. 다른 모든 산업에서도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산을 조직할 잠재력이 있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노동계급의 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생산·공급하고, 단열이 잘 되도록 집을 수리하고, 대중교통을 대거 확충하고, 재난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시설을 늘리는 일 등은 모두 노동자들의 손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다.

오늘날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는 인기 있는 구호이다.

이를 위한 진정한 동력은 시장이나 권력자들 사이의 협상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기후 위기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투쟁이 전진하는 데서 나올 것이다.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 기후 위기: 세계 정상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소피 스콰이어

11월 초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린다. 오늘날 기후 혼란은 중대한 고비에 이르러 있다. 지구가 빠르게 더워진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최대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재앙을 피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런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를 지난 기후변화정상회의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다.

최초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1995년이 돼야 열렸다. 이것도 이미 때늦은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1970년대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우려를 표해 왔지만, 세계 지도자들은 1990년대가 돼야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다.

1994년이 돼야 비로소 기후 문제 대응에 착수하기 위한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기분협약(UNFCCC)'이 발효됐다.

“COP”는 ‘당사국 총회’라는 뜻으로, UNFCCC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기구다. 이 정상회의에는 UNFCCC 회원국들 대표들과 특별 선임된 NGO·과학자들이 참가한다. 올해 열릴 COP26에는 197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1995년 제1차 COP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여기서 채택된 최초의 결정문은 기후 위기의 성격에 관한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진실을 확인했다. “기후 변화의 세계적 성격 때문에 모든 국가가 가능한 한 폭넓게 협력하고, 유효하고 적절한 국제적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각국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를 일체 기각했다. 자국의 경제 성장에 너무 큰 제약을 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세계 지도자들은 2000년을 목표치를 달성하는 해가 아니라, 대처를 시작하기에 좋은 해로 설정했다.

제1차 COP의 마지막 날 참가국들은 ‘베를린 위임사항’을 타협안으로 서둘러 채택했다.

### 교토의정서

이 문서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향후



기후 위기를 극복할 희망은 강대국 정상들의 회의장 안이 아니라 그 바깥의 대중 투쟁에 있다. 9월 24일 독일에서 열린 기후 행동에 10만 명이 참가한 모습

5년 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98년 제3차 COP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는데, 몇몇 기후 운동가들은 이것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토의정서는 37개 공업국에 각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발도상국들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시한다는 것이었다.

교토의정서에 담긴 거창해 보이는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전혀 이행을 서두르지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이 돼야 발효됐다. 그리고 2008년, 즉 이 의정서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 10년도 더 지나고 나서야 첫 의무 이행 기간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0~2010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32퍼센트나 더 늘어나도록 방치됐다. 이 기간 중에 나타난 소폭의 감소는 2007~2008년 금융 공황 때문이었다. 지배자들은 교토의정서가 복잡한 관료적 절차 때문에 시행이 늦어졌다고 돌려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미루려고 고안된 것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없는 채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의정서를 두고 감론을박이 벌어지는 동안, 기후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9년이나 허

비됐다.

COP 행사 이후에는 늘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 회의 과정 전반이 제약에 매이고 한계를 드러냈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속을 위한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기구였기 때문이다.

COP는 필요한 조치에 관해 입에 발린 말을 한다. 그것이 이윤과 축적에 대한 지배자들의 탐욕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말이다.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 위기가 인류에게 몰고 올 당면 위협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공저자들은 “지구 온난화는 그 증거가 뚜렷하며, 인류의 활동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각국이 협력한다면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실질적인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세계 GDP의 최대 0.12퍼센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 무시

과학자들은 세계 지도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경고와 구명 밧줄을 모두 건넸지만, 권력자들은 이를 무시했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회의에서도 각국은 늘 그랬듯

이 말다툼이나 벌였다.

그 회의에서 유일하게 나온 실질적인 결과는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2년 후나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2년이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COP가 열렸다. COP의 역사에는 여러 “중대 회의”가 있는데, 코펜하겐 회의도 그중 하나였다.

기후 운동과 시민사회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마침내 체결되리라 믿고 진심으로 이 회의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또다시 산산조각났다.

조금치라도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각국이 벌인 쟁투는 길고 지리했다.

교토의정서가 그런 사례였다. 2012년에 의정서의 효력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은 바로 다음해에 무산됐다. 세계 지도자들은 자그마치 21년 동안 티격태격하다가 마침내 모종의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것이 바로 파리기후협약이다.

파리기후협약은 2016년 제21차 COP에서 196국에 의해 채택됐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 좋기로는 1.5도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각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년마다 얼마나 감축할지를 제시하는 첫 보

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인국들 중 겨우 75개국만이 올해 제출 기한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고작 16개국만이 공약된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20여 년에 걸친 무익한 회의들 끝에 나온, 구속력이 있다는 이 협약은 결국 이전 협약만큼이나 엉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세계 지도자들은 파리기후협약 합의를 자화자찬했고, 실질적 조치를 거의 제안하지 않는 정상회의를 이후 세 차례 더 열었다.

올해 11월에 열릴 제26차 COP도 “중대 회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번 회의는 IPCC 6차 보고서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촉발한 과정들 중 많은 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의 개최국인]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은 다가오는 정상회의를 “지구와 인류에게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포장했다.

하지만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되고 무대응이 계속된 지난 20여 년을 볼 때, 제26차 COP 역시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지 못할 공산이 크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 지배자들의 무대응과 위선에 맞선 시위의 역사

COP의 역사는 기후 위기 대처에 앞장서는 것처럼 구는 세계 지도자들의 무대응과 늑장으로 점철된 역사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이를 그냥 보아 넘겼던 것은 아니다.

COP는 줄곧, 기후 변화에 대한 무대응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체제 자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계기가 됐다.

호화로운 회의장 앞에서는, 그 회의에 참가한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가난으로 내몰린 분노한 사람들의 시위가 벌어져 왔다.

회의장 내의 난맥상은, 회의장 밖 시위대를 진압하는 국가 폭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룰 때가 많았다.

2009년 제15차 코펜하겐 COP 때는 회의장 밖에서 기후 운동가 약 10만 명이 맹렬한 시위를 벌였다.

〈소셜리스트 워커〉는 당시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보도했다.

“덴마크 시위 진압 경찰은 여러 도로로 시위대를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일부 시위 대열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전술을 펴고, 새로 제정된 ‘선제적 체포’법에 근거해 거의 1000명(시위 참가자의 1퍼센트)을 체포했다.”

2년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COP 때는 시위 규모가 비교적 작았지만 활력은 다른 시위들 못지 않았다.

1만 명 넘는 시위대가 더반 거리에 나와 COP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했다. 한 회의장으로 뚫고 들어가는 데 성공한 활동가들은 기후 위기가 아프리카 전역에 죽음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팻말을 쥐고 흔들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우자” 9월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기후 행동

2015년 제21차 파리 COP 때도 대규모 시위대가 정부의 불허에도 굴하지 않고 거리에 나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기후 운동이 크게 성장했다. 여기에는 2018년도 유엔 IPCC 보고서도 일정한 구실을 했다. 이 보고서는 평균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조처가 시급하다고 권고했

다.

## 툰베리

COP에 참가한 통치자들은 이 운동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연설자로 초청했던 것이다.

현재 세계 지도자들, 예컨대 미국 대

통령 조 바이든은 환경을 걱정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지도자로 비쳐야 한다는 압력을 점점 더 크게 받고 있다.

하지만 시위의 중요성은 단지 정책 입안자들에게 개혁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는 데에만 있지 않다. 시위는 다른 종류의 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기회다.

국가가 탄압 능력으로 일반 대중을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느라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체제가 가능함을 주장할 기회인 것이다.

이번 제26차 COP가 열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희망은 회의장 안이 아니라 밖에 있을 것이다.

# 기후 위기 대응에 어깃장을 놓아 온 강대국들

국제적으로 환경 오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강대국들이 COP에서 어깃장을 놓아 온 오랜 역사가 있다.

2007년 제13차 발리 COP가 그런 사례다. 당시 미국 대표단이 지연 전술을 써 회의 진행을 가로막으면서 회의장에서 긴장이 고조됐다.

파푸아뉴기니 대표 케빈 콘라드가 미국 측에 이렇게 말한 것은 유명하다. “당신들이 이끌 수 없으면 우리에게 맡겨라. 제발 길을 막지 말고 비켜라.”

하지만 미국의 전술은 통했다. 미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퍼센트 감축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저지했다.

강대국들은 COP에서 막무가내로 약속을 미루고 최소한만 약속하려 했다. 경악스럽게도, 미국과 중국은 2014년이 돼서야 온실가스 감축을 겨우 약속했다.

이런 나라들은 어쩔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강력한 불록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서

로의 발목을 붙잡으려 한다.

2001년에 미국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언젠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개발도상국들이 의무 이행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말이다.

2005년에는 미국 주도로 새로운 협약 ‘청정 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APP)이 출범했다. 이 협약에는 호주·캐나다·중국·인도·한국이 서명했다.

미국은 이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안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안적 전략’은 기후 변화 대응 목표 이행을 회원국들의 의무로 두지 않았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이 파트너십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새로운 성과 지향적 파트너십으로서, 각국이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그 적용을 가속

시킬 수 있게 해서, 빈곤을 줄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국가적으로 오염을 감축하고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고 기후 변화 우려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청정 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은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벌인 또 다른 시도였을 뿐이다. 즉, 친환경적으로 보이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최대 환경 오염국들은 이런 행태와 단절한 것처럼 언뜻 보일 수도 있다.

## 서명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것은, 경제가 덜 발전한 나라들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됐기 때문임을 봐야 한다. 게다가 미국은 2017년에 당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결정으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



전 세계 지배자들은 COP26에서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못할 것이다

해 3년 동안 협정 바깥에 있었다.

이윤 추구는 COP 회의장에서 언제나 기본 전제로 여겨졌다. 특히 세계 최강국들에 의해 그렇게 됐다.

그런 나라들에게 경제적 지배와 제국주의 경쟁은 언제나 환경 보전보다 중요했다. 국가 간 갈등과 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유의미

한 진전이 불가능하다.

경제 성장과 제국주의 갈등을 지속시킬 COP 과정은 이 체제에 “말뚝을 일으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불충분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74호 번역 김준호

## 그리스 사회주의자 초청 강연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 유럽 사회민주주의 좌파의 최근 경험

## 그리스 시리자를 중심으로

파노스 가르가나스

이 글은 9월 30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유럽 사회민주주의 좌파의 최근 경험 — 그리스 시리자를 중심으로'에서 파노스 가르가나스(아래 사진)가 한 발표와 정리 발언을 글로 옮긴 것이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기관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이다. 이 토론회를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가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녹취 정리를 도운 나유정 동지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오늘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 동지들의 연대 인사를 전합니다. 이곳 동지들은 한국 동지들의 활동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10~15년 유럽 좌파들의 경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 시기 대부분 좌파 투사들은, 좌파의 부흥을 약속하는 단체들에 가입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의 시리자, 영국의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이 바로 그런 방향을 공약하며 좌파 투사와 단체들에 합류를 종용했습니다.

이런 종용은 이탈리아 리폰다치오네(재건공산당)의 지도자 파우스토 베르티노티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혁명가들은 혁명을 선사하지 못했고, 개혁주의자들도 개혁을 제공하지 못했다. 새로운 급진 좌파가 필요하다.'

이는 얼핏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지만, 사실 매우 오래된 전략인 '의회를 통한 권력 장악'의 재탕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시도들이 초기에는 반짝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그 결과로 매우 실망스러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는 [위에서 열거한] 모든 사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만, 저는 특히 그리스의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가르가나스(아래 사진)가

## 긴축 철회 약속했던 시리자, 배신하다

그리스의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그리스 사회당(PASOK)이었습니다. 사회당은 1981~2010년까지 매우 오랫동안 집권했습니다.

사회당은 2012년에 무너지고 마는데, 사회당 정부가 은행들을 구제하려고 매우 고통스런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임금·연금·복지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자는 이 긴축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하며 부상했습니다.

그런 약속 덕에,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섰던 덕에 시리자는 2015년에 집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 승리 후 6개월도 안 돼 시리자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은행가들을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은행가들에게 맞설 것인가?'

시리자는 둘 사이에 타협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가들은 타협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중앙은행을 통해 그리스 정부의 자금줄을 끊으려 힘을 모았습니다.

은행들이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자 시리자는 굴복했고,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조직해 은행들을 장악한



시리자(아래 사진)가

시리자는 유럽연합의 긴축 압력에 굴복했다. 2015년 당시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와 시리자 정부 총리 치프라스

다는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시리자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 타협

이런 굴복을 시작으로 시리자는 타협에 타협을 거듭하고 점점 더 우경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정책에서 타협하기

시작했지만, 이후 타협은 정부 정책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 번졌습니다.

난민 문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2015년에 시리자는 그리스로 들어오는 수많은 난민들을 환영하는 운동과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국경을 점점 굳게 닫아걸자, 시리자도 그리스 국경 폐쇄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 노동계급 중심 전략의 중요성

이런 경험들에는 핵심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 역량을 중심에 두는 명료한 전략이 좌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회주의적 길에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조직해 작업장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보다 선거 승리가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계급에 희망을 거는 것이 의회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좌파

시리자에 합류했던 좌파 단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리자가 부상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급진 좌파 단체들이 시리자에 합류했습니다. 전에 마오주의 단체였던 곳도 있었고, 트로츠키주의 단체였던 곳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술이 꽤나 성공적인 듯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시리자 지도 위원회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의원들을 몇몇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자가 집권하고 은행가들과 유럽연합의 협박에 굴복했을 때, 이 좌파 단체들은 시리자의 배신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리자의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그리스 총리가 됐고, 총리 자리를 이용해 당내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치프라스는 총리로서 국가 관료 기구를 이용해 [통치하며] 당내 민주주의에 전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혁명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동계급에 뿌리 내리고 노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의회에서 의석을 얻거나 시리자 중앙위원회에서 요직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좌파] 단체들은 의회주의의 단체인 시리자 내에 있으면서 혁명가들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너희들은 시리자에 가입도 하지 않는 종파주의자들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습니다. 이제 시리자가 이토록 우경화하자, 그 단체들

은 시리자를 떠나야 했고 현재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 급진화

하지만 낙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시리자의] 배신이 거듭된 후, 노동계급 내에서 새로운 급진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민주당 정부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노동자·학생 투사들이 많은데, 이들은 시리자에 대한 환상이 전보다 덜합니다.

투사들은 지난 한 주기를 거치며 엄청난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시리자 집권을 위해 투쟁했고, 시리자의 타협에 맞서 투쟁했으며, 이제는 시리자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좌파의 한계를 뛰어넘는 좌파 세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 모든 경험을 거친 후 이제 혁명가들은 더 강력한 혁명적 좌파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이 하려 애쓰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파업 조직을 지원하고, 반

타협에 타협이 꼬리를 문 결과, 현재 시리자의 전반적 정책은 올라프 솔츠의 독일 사민당(SPD)이나 키어 스타머의 영국 노동당 같은 주류 사회민주당 수준으로 우경화했습니다.

현재 시리자는 야당이고, 우파 정당인 신민주당이 집권해 있습니다.

신민주당 정부에 맞서 매우 강력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에 맞서 싸우고, 여성들은 여성 권리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에 맞서 거리 시위를 벌입니다.

하지만 신민주당 정부에 대한 반감이 이토록 광범한데도 시리자는 여론 조사에서 신민주당보다 지지율이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시리자가 너무 우경화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정서와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영국의 제러미 코빈 사례도 비슷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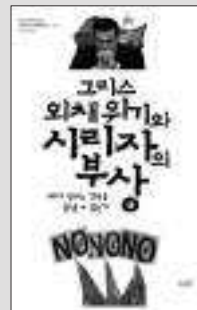
코빈은 브렉시트를 두고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코빈은 명료한 좌파적 브렉시트 입장을 채택하기보다는 선택을 회피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코빈이 타협을 택하면서, 코빈 자신도 패배를 겪었고 노동당도 우경화했습니다.

(反)파시즘 운동을 조직하고, 극우의 준동에 맞선 운동을 조직하고, 난민에 대한 국경 개방을 [요구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리자에 몸담았던 사람들과 시리자 당원들에게 이런 투쟁들에 동참하라고, 함께 투쟁을 건설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리자의] 배신과 타협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 추천 책



## 그리스 외채 위기와 시리자의 부상

파노스 가르가나스 외저,  
차승일 역음, 책갈피, 232쪽, 12,000원



사진 출처: 그리스 노동자 연대

그리스 노동자·학생 투사들은 시리자 정부를 집권시키고, 그 정부의 타협에도 맞서 싸우며 엄청난 경험을 겪었다. 2015년 7월 시리자 정부가 합의한 긴축안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공공부문 노동자들

## 발제자의 정리

먼저, 그리스뿐 아니라 영국의 제러미 코빈과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 여러 다른 좌파들의 부침에 관해 풍부하게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쟁점을 명료하게 하는 데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쟁점 중 하나가 지중해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각축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전쟁 발발 위험까지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이에 관해서는 2019년 12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린 “그리스와 터키, 키프로스 간 전쟁 위험을 경계한다”를 참고하십시오]

좌파 개혁주의적 입장과 혁명적 입장의 차이는, 전자는 이런 문제에서 굴복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좌파 개혁주의자들은 ‘애국적 좌파’를 자처합니다. 반면, 혁명적 좌파는 국제주의 좌파입니다.

시리자는 현재 야당입니다만, 신민주당 정부가 터키에 너무 무르다고 비난합니다. 시리자에 비판적인 그리스공산당(KKE)도 시리자와 입장이 비슷한데, 이들은 시리자와 신민주당 모두가 그리스의 국익을 배신한다고 비난합니다.

반면 저희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중해 동부 해역의 통제권을 두고, 석유·천연가스 채굴권을 누가 얼마나 점유할지를 두고 벌이는 갈등은 반동적 경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리스·터키뿐 아니라 이 경쟁에 발 들인 나라들 모두, 특히 이탈리아·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모두 반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다국적기업들이 지중해 동부에서 시추권을 얻으려 벌이는 쟁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 그린 뉴딜

이 문제는 ‘그린뉴딜’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녹색 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당[시리

자]이 동시에 ‘지중해 동부의 석유·천연가스 채굴권은 그리스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독하게 위선적인 것입니다. 석유·천연가스는 화석 연료이고, 캐내면 캐낼수록 기후 문제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시리자는 그리스의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 계획을 지지하면서도, 키프로스·이집트·이스라엘 등의 인근 해역[지중해 동부]에서 석유를 시추할 권리가 그리스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개혁주의자들과 혁명가들 사이의 차이는 여러 사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저 경제 정책에서 긴축 지지냐, 긴축 완화냐, 약간의 긴축이나, 노동자 투쟁 지지냐 하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정책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개혁주의자들과 혁명가들 사이의 차이는 대외 정책, 전쟁 위협, 기후 변화 등에서도 드러납니다. 전체 스펙트럼을 모두 봐야 합니다.

### 계급의식

노동자들의 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현재 그리스 노동자들은 신민주당 정부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급진화·좌경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급 의식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들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자율주의나 연성 아나키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시리자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상들의 뿌리는 깊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 좌파가 혁명적 사상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쟁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하는 노력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는 보건 노동자들의 파업에 개입해, 파업을 지원하고 기층 노동자들이 단체를 조직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과 팬데믹 와중에 당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노동조합 투쟁 지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반(反)파시즘 운동에 동참시키려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을 때, 시리자 지도부는 이 나치들의 혐의가 분명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희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분투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 투사들의 의식 속에, 혁명적 좌파 덕분에 반(反)파시즘 운동이 건설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각인됐습니다.

### 수행해야 할 과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급진화와 노동자들의 반격에서 [혁명적] 좌파들이 자동으로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혁명적 좌파들은 노동계급에 혁명적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능동적인 투사들을 국제주의와 노동자 권력이라는 사상으로 설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가 쟁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연대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속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은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역 천정록

##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록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이스라엘 비판은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영국 브리스틀대학교가 사회학 교수 데이비드 밀러를 해임한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오랫동안 좌파 활동가로 지내 온 밀러는 권력자들이 대중 매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연구해 왔다. 밀러는 시온주의 반대자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억압에 반대한다. 밀러는 친이스라엘 학생들과 언쟁을 했다가 유대인 혐오자로 몰렸다.

브리스틀대학교 당국의 발표는 밀러의 해임 사유에 관해 매우 모호하게 말한다. 대학 당국은 “학생 모두와 더 넓은 대학 공동체를 돌볼 의무”에 관해 알맹이 없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그러면서도 고위 변호사의 조사 결과 밀러가 “위법적인 발언”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밀러 자신에 따르면, 그 조사는 정확히 유대인 혐오자라는 혐의가 거짓임을 입증해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밀러가 해임된 이유는 무엇일까? 내 추측으로는, 심증팔구 정부의 압력으로 대학 당국이 밀러를 제거하고 싶어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 당국은 밀러가 유대인 혐오자임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받았을지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를 명분으로 밀러를 해임했다. 이런 책략은 오늘날 대학 고위 운영자들 사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마치 기업주들처럼 학교를 운영한다.

브리스틀대학교 당국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학문의 자유에 헌신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불가능하다.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해서 교황과 추기경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종교 재판을 열어 갈릴레오에게 지동설을 철회하라고 강요한 것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밀러의 말에 전부 동의해야 밀러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밀러는 브리스틀대학교가 “이스라엘의 로비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하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국가에서 로비”를 벌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영국 국가에 적대적일 수 있다는 말인가? 예컨대, 1956년 수에즈 위기 당시 수에즈 운하 탈환에 나설 명분을 찾던 영국과 프랑스와 공모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영국에 적대적이었는가?

이는 더 큰 문제와 연관이 있다. 물론 이스라엘은 영국에서 로비를 벌인다. 대부분의 다른 서방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로비를 벌인다. 하지만 그 국가들이



3월 31일 브리스틀대에서 열린 데이비드 밀러 교수 방어 캠페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로비 때문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에즈 운하 위기에서 벌인 공모가 이것의 좋은 사례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온주의 운동이 팔레스타인을 식민 점령하던 영국을 상대로 가차없는 무장 투쟁을 벌인 지 10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서방 제국주의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중동을 서방 패권 하에 묶어 두는 데에 이스라엘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놈 촘스키는 이스라엘 로비의 영향력을 이미 오래 전에 일축했다. 촘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 이스라

엘의 로비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대립하지 않는다. 설사 둘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해도, 지정학적 전략 기획자들이 승리한다. 여러 쟁점에서 거듭 확인되는 바다.”

이와 비슷하게, 그간 이스라엘 지지자들은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좌파들을 유대인 혐오자로 모는 거짓 비방에 매우 열심이었지만(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이 대표적인 표적이었다), 이런 캠페인이 크게 증폭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우익 신문] <데일리 메일> 같은 부류 때문이었다. 그러나 <데일리 메일>은 1930년대에 파시스

트 ‘검은셔츠단’의 유대인 혐오 시위를 지지했다. 영국 지배계급들이 보기에, 광범한 좌파들에게 유대인 혐오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이유에서 득이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로비의 중요성에 관한 이견은 지금 밀러에게 연대할 필요성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동의하지 않는 견해가 탄압받을 때 관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행동 수칙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 같은 자유주의 기구들이 스스로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밀러는 총리 보리스 존슨이 벌이는 ‘문화 전쟁’의 피해자다. 존슨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반제국주의 좌파만 노리고 있지 않다. 영국 지배계급이 수 세기 동안 인류를 상대로 저질러 온 범죄 행위를 폭로해 온 학자들도 겨냥하고 있다.

이 ‘문화 전쟁’은 심증팔구 격화될 것이다. 존슨이 어처구니없게도 [전 보건부 차관이자 팬데믹 대응 실패에 책임이 있는] 네이던 도리스를 문화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험한 신호다. 키어스타머 하의 영국 노동당은 — 그들이 반동적이라 폄하하는 노동계급의 표를 [보수당에게서] 되찾아오려 애쓰지만 — 이를 전혀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밀러를 방어하는 것이 사활적이다. 밀러가 당하면, 부패하고 비겁한 도처의 대학 당국들은 비판적 학자들과 활동가들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압력에 부응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74호 / 번역 김준호

## 그리스

# 정부·경찰의 비호 하에 파시스트들이 활동가들을 공격하다

그리스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

그리스 반(反)파시즘 운동의 성과로 지난해 10월 7일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이 ‘범죄 조직’ 판결을 받아 커다란 타격을 입었었다.(관련 기사 본지 339호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황금새벽당 ‘범죄조직’ 판결은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하지만 최근 그리스 파시스트들이 정부와 경찰의 비호 하에서 다시 자신감을 얻고 있다. 이들은 10월 3일 아테네에서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활동가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 글은 이 공격 직후 그리스의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공동전선인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이하 “KEERFA”)가 발표한 성명이다. 구체적인 집회 일정을 알리는 마지막 문단은 생략했다.

우리는 10월 3일 아테네시(市) 네오이라클리오구(區)에서 개최된 KEERFA 행사에서 벌어진 파시스트들의 공격을 규탄한다. 이 행사는 나치 강패 집단인 황금새벽당이 역사적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10월 9일 반(反)파시즘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파시스트들은 최근 테살로니키시(市) 스타브루폴리구(區)에서 그리스 공산당 청년조직(KNE) 투사들을 공격한 것에 정부가 관용적 태도를 보이

자 크게 고무됐고, 지역 수준에서 돌격대를 통해 재건을 꾀하고 있다.

사건 당시 KEERFA 회원들은 집회를 준비하며 확성기로 행인들에게 참여를 호소하고 있었다. 황금새벽당 지부 소속 파시스트 15~20명이 몽둥이와 헬멧으로 무장하고 몰려와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KEERFA 회원들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KEERFA 회원 4명이 크게 다쳐 에방겔리스모스 병원으로 이송됐다. 파시스트 강패들은 정치 선전물을 비치한 탁자를 부수고 음향 장



10월 3일 반파시즘 활동가들을 공격한 파시스트들

비를 일부 훼손했다. 이들은 공격·철수 명령에 맞춰 보란듯이 나치식 경례를 하기도 했다. 부상자 중에는 그리스 <노동자 연대> 기자와 아테네시 마루시 지방의원 아프로디티 프랑구도 있었다. 주민들은 즉각 파시스트들에 맞섰다. 인근 카페에 있던 주민 수십 명이 광장으로 몰려와서 파시스트들을 골목으로 쫓아냈다.

파시스트들의 이 대담한 공격은 극

좌·극우를 모두 공격하는 “반극단주의론”을 내세우는 신민주당 정부의 지지와, 경찰의 전적인 용인과 비호 하에 이루어졌다.

경찰들은 파시스트들이 달아난 지 한참 후이나 왔으며, 주민들에게 공격이 벌어지는 동안 어디 있었느냐는 질타를 들었다. 지방경찰(ELAS) 간부는 광장에서 두 블럭 떨어진 채 상황을 조용히 “주시”하라는 명령이 “윗선”에서

내려왔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KEERFA의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주민들도 많이 참가했다. 행사에서 주민들은 [파시스트들에 대한]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발언자 중에는 이라클리오, 네아이오니아, 마루시 지방의 원들도 있었다. 말라가사 난민 수용소에서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노동자, 학생, 행인 등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파시즘과 인종차별, 이를 배양하는 정부와 체제에 맞선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파시스트들의 습격은 우리를 겁주지 못한다. 우리를 분노하게 할 뿐이다. 우리는 투쟁으로 그들의 지도자를 감옥에 보내 버렸다. 우리는 전투적인 대중 투쟁을 고조시켜서 반(反)노동자적이고 빈곤·인종차별·성차별을 부추기는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파시스트와 착취, 차별이 없는 사회를 건설할 길을 닦을 것이다.

출처 KEERFA 페이스북 / 번역 이원웅

#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전주현

문제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1인 가구 증가는 세계적 추세의 일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0퍼센트를 넘는 다.

학업과 직장 등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독립한 청년들은 도시로 유입되면서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도 1인 가구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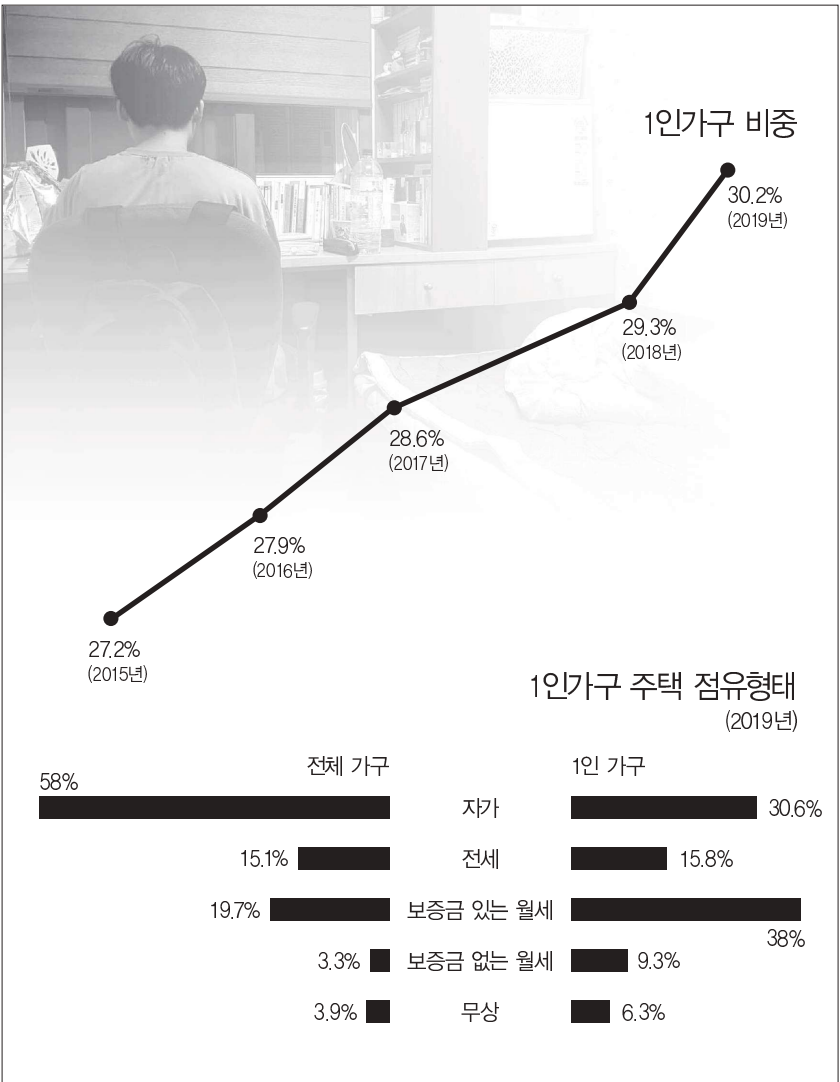
질 낮은 일자리와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제도에 얽매어 살기를 원치 않는 층이 늘어난 것도 1인 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중장년층 이상의 1인 가구도 크게 늘었다.

## 외롭고 고달픈 삶

1인 가구의 삶은 대체로 ‘화려한 싱글 라이프’와는 거리가 멀다.

청년·노동자 등 서민층 1인 가구는 장기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점점 곤궁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최악의 청년 실업, 질 나쁜 일자리, 부채 등으로 청년 1인 가구 빈곤층도 크게 늘고 있다.



1인 가구 실태 1인 가구 비중은 느는데 조건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 6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1인 가구의 40퍼센트는 무직자다. 1인 가구 통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취업률이 60퍼센트 아래로 감소했다.

1인 가구 취업자 중 33퍼센트는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다. 100만 원 미만도 11.7퍼센트나 된다(2021, 통계청).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 열풍으로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1인 가구의 47퍼센트, 청년 1인 가구의 65퍼센트는 월세를 내고 살고 있

다(2020, 통계청). 공공임대 주택은 매우 적은 데다, 알량한 제공 혜택조차 다인 가구에 주로 맞춰져 있다.

독거 노인 문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독거 노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21년 기준으로 노인 5명 중 1명이 혼자 산다. 한국의 노인 복지는 매우 열악해 독거 노인들은 일자리·식사·의료·주거 안정·위급 상황 대처 등 삶 전반이 매우 취약하다.

최근 노인뿐 아니라 청년 1인 가구의 자살과 고독사가 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코로나 하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더 커져 고통이 가중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져 왔다.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려 하는 배경이다.

얼마 전에 법무부가 내놓은 두 가지 법률 개정안도 이런 대책의 일환이다.

하나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 반려동물 비물건화

독신자 일반 입양은 2007년 법 개정으로 허용됐으나, 친양자 입양(자녀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은 계속 금지됐다. 독신자에게만 제한을 두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었다. 이제라도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이 허용돼 한부모 가족과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 완화에 일부 이바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1인 가구라는 점 때문에 일반 입양처럼 지나치게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허용 조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적절한 양육 조건의 기준 선정과 심사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입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더 중요하다.

한편,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안도 진즉 도입됐어야 마땅한 조치이다. 자본주의에 의한 소외와 가족 형태의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났다. 약 1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1인 가구의 10명 중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

서로 교감하고 유대가 형성된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당해 압류 대상이 되거나, 의료사고 등 부당한 일을 당해도 법적 수단이 매우 미미했던 현실은 반려동물 지위 향상으로 일부 개선될 듯하다.

다만, 1인 가구의 정신 건강과 유대감 증진을 위한 조치라면,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 줄 방안들(가령, 병원 진료비 지원 등)이 마련돼야 한다.

법무부의 ‘사공일가’ 법률 개정안 외에, 정부는 아직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방안과 예산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이 직접 “종합 대책 마련”을 강조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말이다.

지나해 6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이 처음 발표됐지만, 추상적 선언 외에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

이처럼 정부 대응이 뒤늦고 알맹이가 없는 이유는 1인 가구 지원 방안이 “저출산 정책과 상충”한다는 점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다인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비용이 드는 방안을 회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급증한 1인 가구의 조건과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1인 가구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이 대량 제공돼야 한다. 또, 돌봄과 의료 공공 서비스 등 복지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

#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권정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

지난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죽음의 원인은 과중한 코로나19 방역 업무였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의 제기로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인은 지난 7~8월 동안 코로나 방역 업무로 120시간 내외의 살인적 초과근무를 했다. 인천시는 선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야간역학조사, 역학조사 기간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확대 등을

인력 충원 없이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인을 비롯한 동료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하게 된 것이다.

이는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5월 23일 부산시 동구보건소에 근무하던 간호직 공무원 노동자도 코로나19 방역 업무 과중이 원인이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에는 전북 전주시 공무원 노동자가 코로나19 비상근무 중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문제는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호우,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공

무원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무를 시키지만 인력 충원과 수당 지급 등 적절한 대처와 보상을 하는 법이 없다.

## 악순환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소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직이 50퍼센트, 휴직이 40퍼센트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무 가중 때문이다.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없이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니 사직과 휴직이 늘고, 남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부담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좁은 공무원 시험 관문을 통과하려고 수년을 바치고 있는

데, 정작 현장 공무원들은 사람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청년을 위로하고, 공무원 노고를 치하할 뿐 필요한 수만큼이라도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해 왔지만 이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고 희생시키면서 유지해 온 것이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선 공무원 노동자들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9월 24일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지자체에 “고인의 순직 인정과 함께 공공의료 확대 및 코로나 대응 관련한 공무원 즉시 충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은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1.9퍼센트로 OECD 평균 6.98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와 지자체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K-방역의 영웅’이라는 정부의 립서비스는 듣기도 싫고 이제는 분노가 치민다. 지금 당장 인력을 충원하라.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서평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중국 저항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다

#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미국 660여 곳에서 시위 열려



▲“더러운 손 치워라”

▶“내 딸을 위해 싸우는 중”



10월 2일, 미국 곳곳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위가 660여 건 열렸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임신 6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데에 분노해 미국 전역에서 분출한 것이다. 이 법은 낙태 시술자 및 낙태 여성을 도운 사람(심지어 여성을 병원으로 태워 보낸 택시 기사도!) 모두를 범죄시한다.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의사 두 명이 기소됐다.

2일 시위를 조직한 연대체 ‘여성 행진’ 사무총장 레이첼 오리어리는 이렇게 말했다.

“텍사스주의 법은 미국 전역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낙태가 합법적

권리이고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믿고 자랐습니다. 텍사스주의 법 통과, 낙태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닥쳤음을 자각하는 계기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시위로는 트럼프 취임 직후 열린 ‘여성 행진’ 이후 가장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그리스 등 유럽 나라들에서도 낙태권 옹호 활동가들과 좌파들이 조직한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날 시위처럼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돼야 한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진 출처 Miki Jordan(틀라카)

◀“우리의 미래, 우리의 투쟁, 우리의 몸”(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팻말)

“내 몸에 금지 걸지 말라”▶



사진 출처 Spencer Lewis(틀라카)

## 출산율 높이려고 낙태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오수민

중국 국무원은 9월 27일에 낸 중국 여성발전요강에서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겠다고 했다. ‘비의료적 낙태 감소’를 위해 어떤 조치가 시행될지 세부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간 억압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제 낙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국가 또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것을 보여 준다.

과거 중국 정부는 급속한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산아제한을 장려했다. 산아제한을 권장하고 피임과 낙태 시설을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1979년에 한 가정에 한 자녀만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가족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 유산, 강제 불임 시술 등을 자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다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자 중국 정부는 2016년에 한 가정당 2명의

자녀를 허용했고, 올해 5월에는 3명까지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출산율은 1.3명, 출생아 수는 약 1200만 명으로 1960년대 이후 가장 적었다. 아동은 인구의 17퍼센트, 60세 이상 인구는 18퍼센트를 차지해 처음으로 노인의 수가 아동의 수를 초월했다.

40년 전과 달리, 이제 중국 지배자들은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면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해져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한다.

그러나 산아제한 완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낙태를 감소시키는 데에 별 효과가 없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에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970만 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졌다. 이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의 수치보다 51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주거, 양육비 등 경제적 압력이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

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 지역(상하이시, 장쑤성 남부 일대)에서 급속하게 집값이 오른 것이 전국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아 기를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서 여성의 선택권을 제약해 출산율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낙태 규제는 안전한 낙태 시술을 어렵게 하면서 서민층 여성들에게 커다란 위험과 부담을 안길 것이다.

##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 471번째 노동자 죽음, 교통사고로 모는 파렴치한 사용자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9월 30일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벌어졌다. 올해 들어 4번째이자, 창사 이래 471번째 산재 사망사고다. 고인은 14톤 굴착기 오른쪽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고인은 현대중공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 형편 없는 노인 복지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일해도 임금은 적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연봉 상한이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를 이용해 고령의 숙련 노동자를 싼 임금으로 고용한다.

고인은 쉬는 시간 즈음에 간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작업통로 건너편에 있는 흡연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온갖 차량이 수시로 오는 작업통로에는 마땅히 안전 조치가 돼 있어야 했다. 그러나 작업자용 통로나 충돌 방지 조치는 없었다.

또, 사측은 굴착기 이동시 유도자를 배치할 생각조차 없었다. 유도자는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운전자의 시야가 좁은 작업 장비를 이동할 때는 꼭 필요하다.

굴착기도 그런 장비다. 굴착기 운전실은 붐대(굴착기 팔)의 한쪽에 있어



서, 다른 한쪽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다.

재해자는 굴착기가 다가오는 소리를 못 들었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의 작업 현장은 매우 시끄러워서 노동자 대부분은 업무 시간에 귀마개를 착용한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통로에서 오토바이나 작업차량이 가까이 접근해 온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깜짝 놀라곤 한다.

상황이 이러니 각자가 주의하라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많다.

전에 자주 일어나던 지게차 관련 사고도 노동자들의 요구로 유도자가 배치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다.

결국 이번 사고는 인건비를 아끼려는 사측의 탐욕이 부른 비극이다.

### 교통사고?

그런데 사측은 파렴치하게도 이번 사고를 교통사고로 몰고 있다. 경찰도 교통사고 관련법 위반으로 굴착기

운전기사를 입건했다. 개인 과실로 몰아 사측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와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누더기로 통과시킨데 이어, 그것조차 약화시키는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

9월 27일 현대중공업 산재 관련 재판에서는 검찰이 현대중공업 사장 한영석을 상대로 겨우 벌금 2000만 원을



인건비 아끼려 노동자 안전은 뒷전 사측이 굴착기 이동시 필요한 유도자를 두지 않은 탓에 고인이 14톤 굴착기(위에)에 깔려 숨졌다. 10월 1일 추모 집회를 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왼쪽)

구형하기도 했다. 4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정부와 사측 모두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에 맞서 노동자가 단결·투쟁해야 진정으로 안전한 노동 조건을 쟁취할 수 있다. 나아가 비극적인 산재 사망 행렬을 끝장 내려면 이윤에 눈 먼 사회 시스템에도 도전해야 한다.

## 현대중공업 산재 재판 참관기

# 노동자 4명의 목숨 값은 2천만 원인가

김경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슈퍼히어로가 악당과 싸워 이겨서 묶어 두면 경찰이 와서 법의 처벌을 내리는 그런 내용을 좋아했었다. 어쩌면 정의가 살아있는 법의 공정함을 꿈꿨던 것 같다. 적어도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지난해 4월 16일 현대중공업 특수선(군함 제작) 부서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잠수함 무장 발사판 도어에 머리가 끼어 목숨을 잃는 중대사고가 있었다.(관련 기사: 본지 319호, '현대중공업 줄이는 중대재해: 안전 조처 무시하고 사고 책임 증거 조작한 사측')

당시 사고를 조사한 특수선 부문 노조 대의원들은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다. 사고 현장에 안전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작업지시서나 작업표준서 같은 지침서도 없었다. 작업자들은 공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위험 작업에 대해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고, 위

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둡고 비좁은 곳에 투입됐다.

결국 노동자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함께 일한 동료 노아무는 자책감과 공포로 일상 생활이 힘든 지경이 됐다. 노아무는 대의원들의 도움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며 산재 승인을 받고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다.

회사의 악행은 사고에서 끝나지 않았다. 재해자가 의료기계에 의지해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시간에, 회사 관리 감독자는 서류 위변조를 시도했다. 나를 포함한 특수선 대의원들은 그런 만행을 찾아내 언론과 고용노동부에 알렸다.

사측은 이 고발에 앞장선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를 시도했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 솜방망이 처벌

9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망)

4건과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 635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현대중공업 사장 한영석을 비롯한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13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또, 특수선 중대재해 당시에 함께 일한 노아무 조합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검찰이 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기소를 한 것이다.

나는 재판 전부터 격양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노아무의 억울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머리 끝까지 분노가 차올랐다.

누가 봐도 노아무는 억울한 피해자였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재판에 출석해야만 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지만, 지부는 지금까지 이런 사고에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없으니 법률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노아무는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

해 재판에 대응해야만 했다.

재판에서 한영석 사장의 변호인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도 사망 사고는 뻔 채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한영석 사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고, 그날 공판은 끝났다.

일부 노조 간부와 산재 단체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적은 구형에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정을 나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어려 있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재판 소식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조합원들 역시 나처럼 분노하고 억울해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공정한 법'에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분노가 치민 듯하다. 법은 노동자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며 멀리 있다는 것,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거센 투

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노아무 조합원에 대한 법률 지원 모금 운동, 탄원서 서명 운동, 선전물 배포로 억울함을 알리고 끈질기게 싸울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힘을 보여 주는 게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싸울 것이다.

한편, 사측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롯기라도 하듯, 9월 30일에 현대중공업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굴착기 바퀴에 치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회사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우기고 있다. 미처도 완전 미쳐 돌아간다.

이날 사망한 고인은 내가 현대중공업에 입사했을 때 나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 선배 노동자다. 엄격하지만 세심하게 일을 가르쳐 줬던 선배의 얼굴이 떠올라 글을 쓰는 내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

정년을 훨씬 넘긴 연세에도 열심히 사셨던 고 최병춘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 SPC 화물 노동자 때려잡으면서 “노동 선진국” 운운하는 정부

이정원

9월 15일 시작된 SPC 화물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SPC 사측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PC 화물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번복하고, 되레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몬 것이 이 파업의 발단이였다.

사측은 운송사들에게 파업에 참가한 SPC 화물노동자 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손배 청구를 확대하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SPC 원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다.

그러나 원청인 SPC의 물류 계열사인 SPC GFC가 애초 노사합의 당사자로 참여했고 최종 합의를 번복하고 파기했다.

SPC 사측은 빵과 재료 수급 차질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파업 노동자들을 향하도록 돌리려 한다. 파업을 비난하는 분위기를 키우고 자신들은 책임에서 쏙 빠지는 교활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노골적으로 SPC 사측을 두둔하자 사측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 반격

정부는 SPC 광주, 세종, 청주 공장 등 화물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는 곳마다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진압했다.

9월 30일 청주 공장 앞 집회를 비롯해 청주 지역 집회 건으로만 벌써 노동자 50명이 입건됐다고 한다. 감염병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집회를 죄다 불법으로 몰고 있다.

SPC 화물 노동자 파업이 정부의 계속되는 노동 탄압에 대한 기층 노동자들의 반격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있어서였다.

정부는 울여름부터 노골적으로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활력있는 부위의 투쟁이 다른 부문을 자극할까 봐 우려한 것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만행은 정부의 노골적 반노동 정책을 선명하게 보여 줬다.

이렇게 노동 탄압에 열을 올리는 정부가 강경화 전 장관을 ILO 사무총장 후보로 내세우며 “노동존중 사회 구현”, “노동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정부의 탄압에도 대체수송 저지도 불사하며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것은 탄압의 약탈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SPC 사측 비호에 여념없는 문재인 정부의 경찰. 9월 30일 SPC청주공장 앞 집회

## 탄압에 맞서 광범한 연대가 필요하다

최근 정의당이 SPC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반대해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

민주당은 ‘노노 갈등’ 사안이라 논란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반대했는데, SPC 사측의 입장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정부의 탄압에 발맞춘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이자 ‘역강 부약’을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사안에 침묵하는 것에 노동자들이 아쉬움을 드러낸다.

한편, 정의당이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과 SPC의 노조 탄압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제빵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도 지원한 만큼, SPC 사측에 맞선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더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의당이 이에 적극 화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용자, 정부, 우파 언론들은 합세해 이 파업을 불법이라 비난하며 노동자들의 무릎을 꿇리려 한다.

그래야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과 10월 하순 화물연대 파업 등 예정된 노동자 투쟁을 단속하기가 수월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SPC 화물 파업에 대한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지난 9월 30일 SPC 청주 공장 앞 집회에서 파업 노동자들은 연대를 적극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경찰의 무지막한 탄압에도 상당한 투지를 발휘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 탄압으로 파업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여러 지역의 SPC 사업장 앞에서 기습 시위와 대체 수송 저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SPC 화물 노동자들의 힘만으로 해고, 손배 청구, 사법 처리 등 정부와 사용자의 흑심한 탄압을 버티며 맞서기는 결코 쉽지 않다.

정부가 이 파업을 탄압해 노동자 투쟁을 위축시키려 하는 만큼, 화물연대본부의 지원만이 아니라 상급노조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힘을 모아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정치 좌파들도 이 투쟁에 대한 정부·언론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연대를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청년과 불평등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10월 14일(목) 오후 8시

발제 양효영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meeting1014](https://bit.ly/meeting1014)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를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가뜩이나 열악하던 청년층의 처지가 코로나19로 더욱 악화했습니다. 높은 실업률에 더해 청년층의 빈곤, 부채, 정신 건강도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초자산제나 기본소득 등으로 기회의 불균등이나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합니다.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까요? 해법은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youtube.com/노동자연대TV](https://youtube.com/노동자연대TV)